

은행 1km내 통폐합도 사전평가…지방 폐쇄 시 불이익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반경 1km 이내 점포 간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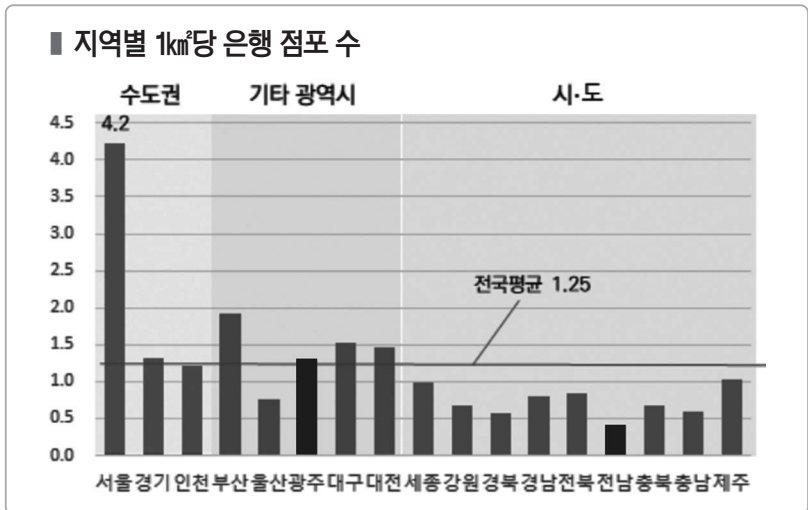
현재 은행권은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1km 예외’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점포 폐쇄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익을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점포 수는 총 5523개로 최근 5년 간 904개가 감소했다.

성인 인구 10만명 당 점포수는 12.7개로,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달리 대부분

금융위,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
지자체 금고 선정 지역재투자평가엔 감점 확대



의 시·도 지역은 인구 대비 점포 밀집도가 전국 평균을 하회해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면적 기준으로도 격차가 뚜렷하다. 1km² 당 점포 수는 1.25개로, 역시 서울은 4.23개에 달하는 반면 시·도 지역은 전부 2개 미만이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한다. 현재 은

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정비하고,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남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지방에서의 점포 유지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는 점포 폐쇄로 대면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

의를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방

안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2016년 1월부터 금융 현장메신저를 운영하면서 금융 현장의 다양한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전달받아 금융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에 활용해왔다. 이날 논의된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도 건의 과제 중 하나였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 출생아 7.7% 증가…‘아이키움’ 정책 결실

작년 11월까지 6017명

혼인 건수 ‘동반 상승’

2909억 투입 52개과제

지난해 광주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올해 저출생 대응을 위해 52개 과제에 총 2909억원을 투입하는 ‘광주 아이키움 2.0’ 정책을 본격 추진, 출산 회복 흐름을 이어갈 계획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통계포털(KOSIS)이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광주 지역 출생아 수는 6017명으로, 전년 동기

(5587명) 대비 7.7% (43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6.2%)을 웃도는 수치로, 출생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혼인 건수도 같은 기간 54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315건) 증가하며 결혼 증가 흐름이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광주시가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출생 정책과 실거주 여건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결혼, 임신, 출생, 양육, 일·생활 균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양육 초기 소득 감소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키움 올인(ALL IN) 광주 4대 케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주요 지원은 출생자정착하상생카드, 첫 만남이음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다태아 출산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난임부부 지원, 영구적 불임에 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등 의료 지원, 손자녀 가족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임원아동돌봄, 삼삼오오 이웃돌봄 등 돌봄 지원, 임신부·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등 일·생활균형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올해 저출생 대응을 위해 52개 과제에 총 2909억원을 투입

하는 ‘광주아이키움 2.0’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출산 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출산 이후 자녀 양육까지 함께하는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임신·출산·돌봄 분야 지원 확대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인상, 누리과정 추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가시화됨에 따라 주·거·일자리·양육 지원 정책의 재정적·제도적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최경화 시 여성가족국장은 “항후 혼인과 출생 증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맘 편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돌파

코스피 5300선 첫 안착

기관 1조7000억 순매수

코스닥도 상승 1149.43

코스피가 4일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300선에 안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7.37p(0.52%) 내린 5260.71로 출발해 83.02p(1.57%) 오른 5371.10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하락 출발했지만 장 초반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최고 5376.92를 찍으며 지난달 30일 기록한 장중 역대 최고치(5321.68)까지 넘어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1조7826억원 순매수하고, 개인과 외국인도 각각 1조 67억원, 940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삼성전자가 전장 대비 0.96% 오른 16만91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에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001조107억원으로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원에 돌파했다.

키움증권 박유악 연구원은 “삼성전자



의 주가는 앞서 언급한 범용 메모리의 가격 급등, HBM4의 가격 전망치 상향 조정, 파운드리 실적 회복 등이 반영돼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 20만원을 유지하고 매수 추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대비 5.31p(0.46%) 내린 1139.02로 시작해 5.10p(0.45%) 오른 1149.43에 장을 마쳤다. 개인이 2330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6억원, 1427억원을 순매도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mail.com

광주 북구 ‘중기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개최

오늘 오후 3시 광주테크노파크…17개 기관 참여

광주 북구가 5일 오후 3시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전에 모집된 50여개 기업 임직원들과 현장 접수 인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며 중소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올해는 북구를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KOTRA 광주전남지원단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국세청 등 17개 기관이 참여해 100여개의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북구는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수출 판로 지원’과 ‘사업화 지원’ 분야 11개 사업

을 설명한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예산 2억2000만원) △광융합 무역축진단 운영(9000만원) △판로개척 바우처 지원사업(7500만원) 등이다. 행사 당일에는 지원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 기관이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고 통합안내 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중소기업 관계자, 주민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중소기업지원과(062-410-6482)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지원사업과 정보를 안내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산·학·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김경환 사장(오른쪽)과 15만번째 가입고객 유상금 여르신이 행사 후 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15만명 돌파…월 평균 127만원 수령

광주 유상금세 가입 기념행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15만명 돌파를 기념해 사은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15만번째 가입자는 광주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상금씨로, “평생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 가입을 결정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7월 출시됐다.

누적 가입자는 2018년 1월 5만명, 2022년 7월 10만명에 이어 지난해 12월 1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4세, 담보 주택 가격은 3억9600만원, 연금 수령액은 약 127만원이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더욱 든든한 노후 안전망이 되도록 제도와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mail.com

장애인 대상 금융·취업 지원 연계 활성화

신용회복위·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 지역본부(본부장 김용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송춘섭)와 장애인 금융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채무조정 상담 연계 강화와 취업연계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

인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및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과 금융 취약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 및 신속한 연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양 기관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채무조정 상담과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상담 및 취업 알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장애인이 금융 문



송춘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왼쪽 네번째)과 김용우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왼쪽 다섯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와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우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취약 상태에 놓이기 쉬운 장애인들이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기 바란다”며 “금융 취약 장애인들의 일상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송춘섭 본부장은 “금융 안정은 취업과 자립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속 가능한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mail.com